

국문요약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새천년개발목표에 포함될 정도로 개도국의 발전에 중요하며 우리나라도 2000년 초부터 이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하였다. 하지만 ICT 분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ICT 분야 개발현황을 살펴본 후, 사업 방향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방문을 통하여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베트남 주재 원조기관과 우리나라의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ICT가 개도국의 경제성장, 사회개발 및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의 사업과는 달리 ICT는 그 자체가 ODA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의 측면이 강하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이나 보건환경의 개선은 그 자체가 개도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ICT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제공을 넘어서 이것들이 개도국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타 분야의 ODA와 비교하여 ICT ODA는 민관협력, 사후관리, 적정기술 제공, 활용성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제 3장에서는 베트남의 ICT 관련 일반현황과 함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ICT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정부조직의 특징,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이미 ICT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로서 ICT가 경제, 사회, 행정,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과 ICT 인프라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국가이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10대 핵심 사회·경제 인프라 중의 하나로 ICT 인프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ICT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ICT에 관한 모든 수요는 IT 인프라 구축,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 개의 국가 프로그램으로 요약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상의 문제점은 IC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미흡한 협력관계를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현황을 일본 및 미국 등 주

요 공여국과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에 대한 ICT ODA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다음이 한국으로, 양국이 앞으로 베트남의 ICT ODA의 주된 공여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내용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 건수가 많았으며, 한국은 공공행정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사업 건수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베트남에 대한 ICT ODA 추이 및 사업내용을 알아보았다. 기관별로 볼 때 베트남을 포함한 우리나라가 지원한 모든 수원국에 대한 ICT ODA 전체 규모에 있어서 EDCF의 유상원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KOICA의 무상원조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기관이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ICT ODA는 공공행정과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큰 데, 주요 사업으로는 한·베 친선 IT대학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ICT ODA 전반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따르면 이 분야 ODA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들이 통일된 국가원조 전략 하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상호간 협업과 분업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베트남의 정치구조, 경제상황, 문화 등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실제로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사업이 현지화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ICT의 전문성과 수원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진행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베트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망 ICT ODA 사업분야를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베트남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는 전자정부 구축으로 대변되는 공공행정 분야의 정보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베트남은 ICT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이며 행정개혁을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ODA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구축은 타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의 ICT ODA 분야의 사업내용과 차별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공공행정 정보화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정책기관에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고려해도 유망한 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CT ODA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ICT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정책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보통신부가 정책조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ICT ODA 분야 개별 사업 수요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에 대한 정보와 현재 베트남 상황에 대한 정보를 DB화를 시키고 이를 전담기관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 ICT는 성격상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수요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절차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쉬우므로 베트남 현지 IT 기업 협의회를 만들어 사업발굴 및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유·무상원조의 연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베트남이 이미 세계은행에서 ICT 분야 대규모 차관을 도입한 예에서 보듯이, ICT 분야의 대규모 유상원조에 대한 수요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 유상을 원조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ODA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ODA 사업이 활용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규모를 늘리고 입찰방식이나 참가제한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에서의 ICT 활용 분야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의 사업과의 연계, 활용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